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 도 자 료** |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
|---|---|---|

**2021년 12월 22일(수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21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21. 12. 21.(화) | 담당부서 | 에너지안전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홍순파 과장(044-203-3980) | 담 당 자 | 최재영 사무관(044-203-3982) |

# 「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 공포, 원격점검 제도 도입

**- 주기별·대면·현장방문 방식 안전점검 → 상시·비대면·원격 점검체계로 전환**

**- 사업비용(기금, '22~'28) 1,491억원 절감, 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을 고기술 전문인력으로 재배치**

**- 원격점검 도입으로 전기재해 감축, 빅데이터·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기대**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기존 인력중심의 **노동집약적 전기안전 점검 제도**를 디지털방식의 **상시·비대면·원격점검 체계로 전환**하는 「**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**」이 1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**12월 21일 공포**되었다고 밝힘

□ 금번 개정 배경은 **'74년부터 50여년간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일일이 1년~3년에 한번씩 방문·대면 점검 형태**로 수행해왔던 전기안전점검 방식이 ①**생활방식 변화**(1인 가구 증가 등), ②**코로나19 확산**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임

○ 이에, **전기안전관리의 실효성·효율성을 제고**하기 위하여 4차 산업기술(ICT·IoT)을 활용하여, **상시·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** 기반을 마련하였으며,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❶ **(원격점검제도 도입)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**하는 경우, 현행 **정기점검 대체** 또는 **정기점검 시기 조정** 근거 마련

❷ **(관제센터 운영)** 원격점검 장치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(수집, 저장, 분석, 경보 등)를 위한 **'관제센터' 설치·운영**

□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, '24년까지 **가로등·신호등, CCTV 등** 공공 전기설비(약 215만호)를 대상으로 원격점검 장치를 **시범적으로 운영**하고, 이후 **다중이용시설, 취약계층 거주 노후시설** 등으로 **점진적 확대**해 나갈 계획임

○ 이와 함께, 관련 **국가표준 제정**, 전기재해 위험예측 기술개발 등을 위한 **연구**(R&D) 등을 통해 새로운 **전기안전관리 체계를 조기 정착**하고,

○ '25년 이후, 원격점검 장치를 한전의 **지능형 원격 검침망**(AMI)**과 연계**하여 **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등을 확충**해 나갈 예정임

□ 산업부는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**전기설비의 소유자·거주자가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**(누전, 단락, 과부하 등)**를 취득**할 수 있어서, **국민 누구나 안전관리 과정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**한 것은 물론,

○ 전기안전점검 **사업비용 절감**(**전력기금 1,491억 원**, `22~`28 누계), 노동집약적 점검인력의 **고기술의 검사·관리 인력**으로 **재배치**(원격관리, 전기차·신재생E 설비 안전점검 등) 등을 통해 **공공기관 운영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함**

□ 아울러, 산업계 등 민간 차원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, 통신,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**에너지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**하고 있으며,

○ 앞으로도, 미래 전략산업인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 등 **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**하여, **인공지능 전기화재 예측 서비스** 등 **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창출**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

【붙 임】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 주요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(☎044-203-39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** **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 주요내용**

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

## 1 혁신적 상시 · 비대면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

산업통상자원부

**현행**

지난 '74년 부터 50여년간

인력 중심의 노동집약적 방문 대면 점검 실시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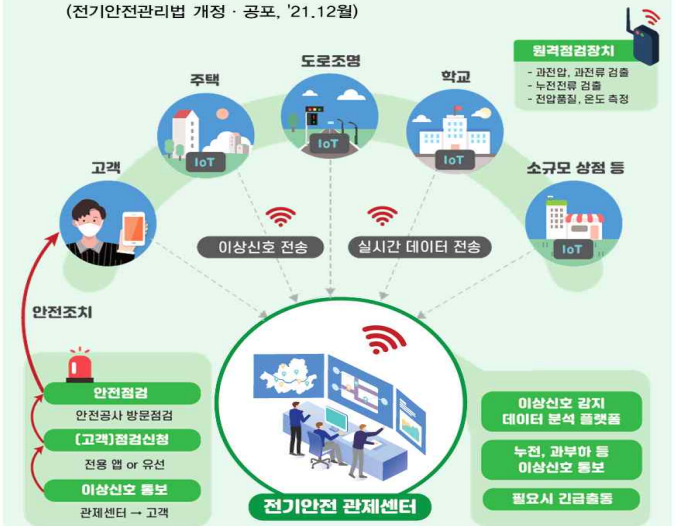





**개편**

**상시 · 비대면 원격점검 체계**

(전기안전관리법 개정 · 공포, '21.12월)




## 2 원격점검 운영 및 보급계획

산업통상자원부

### 1 원격점검 운영




### 2 보급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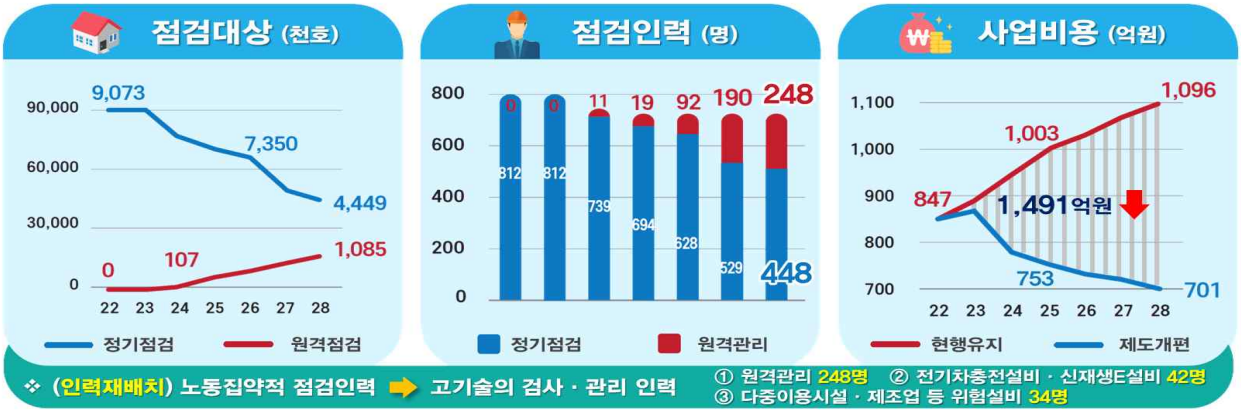



- 도로조명시설(기존 215만개, 신규 연 30만개)
- R&D(안전 기능을 갖춘 전력량계 개발 등)
- 주택(취약계층 노후시설 우선, 약 4만호)
- 전기안전관제센터 구축
- 모든 일반주택 AMI 활용 보급(886만호)
- 원격점검체계 정착화

## 3 예산절감 및 인력 재배치

산업통상자원부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정기점검 | '22년 : 9,073천호(812명) | '28년 : 4,449천호(448명) | 4,624천호 ↓ 364명 ↓ |
| 원격점검 · 관리 | '24년 : 107천호(11명) | '28년 : 1,085천호(248명) | 978천호 237명 |
| 예산절감 | '22~28년 : 6,887억원(현행) | 제도개편 : 5,396억원 | 1,491억원 ↓ |




❖ (인력재배치) 노동집약적 점검인력 ➡ 고기술의 검사 · 관리 인력

① 원격관리 248명 ② 전기차충전설비 · 신재생E설비 42명
③ 다중이용시설 · 제조업 등 위험설비 34명

## 4 전기안전의 미래

산업통상자원부

